

## 중소기업들 GR 대비 미흡

중소기업들은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국제규범인 그린라운드(GR)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 이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소기업학회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천2백개 업체중 77.1%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70.3%의 업체는 최소한의 규범을 지키는 데 급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규범을 아예 지키지 못하는 곳도 5.2%나 됐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업체가 20.8%, 정보수집 단계라고 답한 곳이 1.6% 등으로 대부분 GR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으며 대책팀을 만들어 경영에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다.

중소기업들이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부족한 자금력 때문이라는 대답이 전체의 2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생산제품의 원가 상승문제 21.6%, 복잡한 행정규정 15.6%, 취약한 환경 관련 산업 13.8% 등이었다.

공단은 자금, 인력, 기술면에서 열악한 중소기업이 GR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인증제도인 ISO 14000에 관련된 내용을 중소기업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환경산업을 집중 육성, 국제환경규제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기술을 개발해 나가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 유입하천에 '수생식물농장' 조성

각종 오·폐수가 흘러들어 크게 오염된 시화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해 시화 담수호 유입하천 하류에 수생식물 농장이 들어선다.

6월 4일 환경부등 시화 담수호 오염 저감 대책반은 시화 담수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단기대책 가운데 하나로 시화 담수호로 흘러들어오는 반월천, 동화천, 삼화천 등 3개 하천 하류에 약 9천4백여평 규모의 수생식물 농장을 조성하기로 구체적인 사업 시행을 수자원공사에 맡겼다.

수생식물 농장에는 주로 유기성 폐기물 정화 기능이 강력한 부레옥잠과 미나리 등을 집중적으로 심을 계획이며 이들 수생식물의 정화 기능을 부추기기 위해 산소

환경관리인. 1996. 7

거품발생기도 곁들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수생식물 농장이 완전히 조성되면 이들 3개 하천의 유기성 폐기물의 절반 가량이 분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3개 하천은 주로 인근 지역 축산농가에서 전혀 정화되지 않은 축산폐수를 흘려보내고 있어 시화 담수호 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축산폐수정화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단기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민원서류 재생종이 의무화

환경부는 앞으로 민원서류 용지로 재생종이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접수를 거부하는 등 재생종이 사용 활성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6월 4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외부 기관이나 업체 등에 대해 '환경부에 보내는 문서는 갱지, 중질지 등 재생종이를 사용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로 했으며 접수되는 문서가 재생종이가 아닐 경우 문서에 대한 회신을 보낼 때 이같은 사실을 지적해주는 등 재생종이 사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이같은 재생종이 사용 권장을 일정기간 홍보, 계도한 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서류 접수를 거부하는 강력한 시책도 검토중이다.

환경부는 우선 환경부 내부에서만 이같은 재생종이 사용을 의무화 한 뒤 성과를 봐서 90여개에 이르는 전 행정기관에 이를 요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년동안 환경부 및 소속기관에 접수된 환경영향평가서등 주요 문서 8종 7백80건, 1만9천1백92부를 분석한 결과 재생종이가 단 한부도 없었다고 설명하고 이를 모두 재생종이로 바꾼다면 연간 2천1백만원의 절약효과와 함께 30년생 나무 2백11그루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환경파괴 복구비용 40조원

경제개발로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려면 우리나라의 경우 40조원(5백억달러)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이사장 김윤환)는 6월 6일 지난 92년 스웨덴 정부가 조사 발표한 '스웨덴 및 지구촌 총 환경부채 현황'을 토대로 국내의 상황을 계산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스웨덴이 분석한 지구촌의 환경부채 총액은 지난해 지구촌 전체 GDP(총생산액)인 23조9천5백억달러(약 1경9천1백60조원)의 약 7.8%에 해당하는 1조8천7백억달러(약 1천4백96조원)였다.

여기에 지난해 우리나라 GDP 4천1백45억달러(약 3백31조6천억원)와 군사력 유지·원자력발전비중 등 환경부채로 간주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대입시켜 산출하면 우리나라의 환경부채 총액은 12%에 해당하는 5백억달러(약 40조원)로 추정됐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1년간 환경부의 '환경오염위반업소 단속결과'를 종합한 결과, 적발건수 16만2천8백69건 중 6%에 해당하는 9천8백13건이 30대 그룹 계열사였다고 밝혔다.

이를 고발·폐쇄명령(5점), 조업정지·사용정지(4점), 개선명령(3점), 과태료 및 경고(2점), 기타(1점) 등 행정처분 정도에 따라 벌점을 매겨보니 고합그룹이 적발건수 6건(17점)으로 '반환경적 기업' 1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효성과 현대가 16점, 15점으로 각각 2, 3위를 나타냈고 △ 롯데, 금호 14점 △ 동국제강, 벽산, 한일 11점 등의 순이었다.

반면 환경오염 위반이 없는 '친환경적 기업'은 한진, 한보, 극동건설, 뉴코아 등이었다고 밝혔다.

## 환경산업 작년 37% 성장

환경오염 방지시설업이 지난해 매우 큰 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6일 환경부가 조사한 '95 방지시설업체 현황 및 공사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7백37개 방지시설업체에서 모두 1조9백56억3백만원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했다.

이는 전년 7백35개 업체에서 8천23억9천7백만원의 공사실적에 비해 무려 36.5%가 성장한 것이다.

분야별 공사실적을 보면 대기분야가 전체의 51%인 5천5백91억5천7백만원으로 1위를 나타냈으며 이어 △ 수질분야 4천8백75억9천1백만원(44.5%) △ 소음·진동 4백88억5천5백만원(4.5%)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공사 1건당 수주금액은 수질이 2억6천3백만원, 대기 1억5천만원, 소음·진동 1억원으로 수질분야의 공사가 가장 덩치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도급순위별 공사실적은 포스코개발(주)가 모두 7백

64억8천5백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이어 한라중공업(주)와 삼성엔지니어링(주)가 각각 7백39억9천4백만원, 7백12억7천만원으로 2,3위를 달렸다.

한편 업종별 투자실적은 자동차·트레일러 등 운송장비가 3백30억8천6백만원을 기록해 전년의 1백60억4천8백만원에 비해 1백6%가 뛰어 올라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97 세계환경의 날 행사 서울 개최

내년 유엔이 주최하는 세계환경의 날 행사가 서울에서 열린다.

환경부는 6월 7일 유엔환경계획 엘리자베스 다우즈 웰 사무총장으로부터 '97년도 세계환경의 날 행사 개최지를 서울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유엔의 공식발표가 나오는대로 행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초청대상자 선정 등 각종 행사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 편성과 유엔과의 업무협약에 나설 방침이다.

환경부는 내년 세계환경의 날 행사가 세계환경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92년 브라질 리우 행사 5주년째인 점을 감안해 범지구적 환경행사로 치른다는 방침 아래 리우선언 및 국가별 환경보전실천과제인 '의제 21'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은 '서울 선언'을 채택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등 정보 통신망을 적극 이용해 전세계 사람들이 가상공간(사이버 스페이스)에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환경운동의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엘 고어 미부통령을 비롯한 저명한 환경 관련 인사를 초청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유엔측이 주 케냐대사관을 통해 행사 유치 의사를 타진해온 것을 계기로 유치 계획을 세웠으며 지난 5월 정식으로 유치신청을 냈다.

## 음식물 쓰레기 1t 경제가치 8만원

하루 1만8천t씩 쏟아져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나 사료로 자원화할 경우 파생되는 경제적 가치는 1t에 최고 8만1천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6월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를 탈수, 발효시켜 퇴비나 가축먹이용 사료로 재활용하는 처리시설을 하루 처리용량 15t 규모로 1개소 지어 가동할 때 여기에서 나오는 제품만 팔아도 연간 1억6천2백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처리시설 가동에 따라 매립지 건설비가 연간 7천만원이 절감되며 이에 따른 매립지 운영경비도 연간 1천3백50만원이 절약된다.

이밖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용인 종량제 봉투 판매비로 1억1백71만원의 수입이 추가돼 처리시설 1개소 설치·운영으로 연간 3억4천7백41만원의 이익이 기대되며 시설운영관리비 2억4백만원과 시설감가상각비 1억3천7백만원을 빼고도 연간 6백21만원의 순수 경제적 가치가 보장된다.

이를 음식물 쓰레기 1t당 가치로 환산할 경우 약 1천3백80원에 이르며 앞으로 음식물 수거료가 현실화할 경우 수거료 수입과 제품판매비가 덩달아 증가함에 따라 총수입은 7억6천만원으로 늘어 1t당 경제적 가치도 약 8만1천1백90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만든 사료와 퇴비는 1kg당 1백60원 안팎에 팔리고 있으며 수거료는 실제 수거에 드는 비용의 30% 가량에 불과하다.

지난 1월부터 난지도에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퇴비 및 사료 생산시설을 시범 가동하고 있는 환경부는 이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시설을 크게 늘리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 차량 매연 단속 대폭 강화

7월부터 매연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6월 1일 버스·트럭 등 대형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7월부터 배출허용기준을 30%로 강화하고 단속체계도 상시단속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행정처분 기준도 현행 80%에서 30%로 배출기준과 동일하게 정해 단속시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7일 이상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단속체계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광역화해 상시단속으로 전환하고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는 등 인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11개소에만 설치된 매연단속초소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시 30여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98년까지 휘발유의 벤젠과 방향족 화합물 함유량을 각각 4%와 45%로 낮추며 경유의

황함유량도 0.05% 이내로 연료품질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오는 98년까지 6대 도시 시내버스, 청소차 등 2만4천대에 매연후 처리장치를 부착하고 2000년까지 전국 중·대형 경유차 53만대에까지 확대, 부착케 할 예정이다.

## 환경단체도 분쟁조정 신청 가능

내년부터 중대한 환경피해나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단체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신청을 낼 수 있게 된다.

또 이미 발생한 환경피해에 국한되던 조정대상이 앞으로는 피해가 예상될 경우 시행이전 사업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6월 13일 이처럼 환경분쟁 신청 당사자와 분쟁조정 범위를 크게 넓힌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이달안에 마련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새로운 법안에서 사업시행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환경피해 또는 생태계 파괴가 극심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단체가 분쟁조정신청을 낼 수 있도록 당사자 적격 인정 범위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조정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환경보호 등 공익목적에 충실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가진 단체에만 이같은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초환경시설 설치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집단민원성 분쟁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정을 위해 환경부는 미국이나 독일에서 인정하고 있는 단체 또는 집단소송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분쟁지역 주민들이 일정한 조건을 갖춰 대표성만 인정받으면 '단체 명'으로 분쟁조정신청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위천공단 조성이나 군포 소각장 건설 등에 따른 집단민원의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개정안에서 환경피해의 범위를 크게 넓혀 환경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도 조정신청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률에 조정신청대상으로 규정된 환경오염 피해 뿐 아니라 생태계 파괴, 지반침하,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 등 문화적 환경피해도 조정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